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영실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 25.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용 관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김영실 의원 등 열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4년 1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1조~제3조)
- 나.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5조)
- 다.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지원과 홍보,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함 (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관련부서 : 보건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4. 1. 16. ~ 1. 22.(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남양주 시민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응급치료법으로서, 심정지 환자 발생시 첫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의 가족과 동료,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응급조치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확산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리 요령과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향상과 응급처치 대응을 확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시민에 대한 침익적 내용이 없는 자치사무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육·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시민 등의 교육)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상설교육장의 운영)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등)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 첨부 사유

○ 2024년도 사업운영 예산액(상설교육장 운영 제외) : 38,200천원

- (교육비) 350천원 × 80회 : 28,000천원

- (소모품비) : 400천원

- (사무관리비) : 9,800천원

○ 상설교육장 운영 시 예상액 : 45,948천원

- (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채용 : 30,648천원

- (장비) 교육용 마네킨,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 5,100천원

- (소모품비) : 400천원

- (사무관리비) : 9,800천원

※ 인력 채용 예산 및 교육장 접근성 문제 등 향후 여건이 조성될 때 상설교육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기관·단체 지원 : 지원 대상·규모·내용 등 구체적 산출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 추계 불가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